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

- 산업협력 대화 중심으로 -

LG경제연구원 김형주
[2016.1.29.]

1. 한-미 정부 간 경제협력 현황

가.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 현황

- ☐ 한미 양국은 2014년 12월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산업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커머셜 다이얼로그 (Commercial Dialogue)'를 발족
 - 커머셜 다이얼로그는 표준/규제, 무역·투자촉진, 무역통계, 지적재산권, 산업 투자, 서비스 등의 핵심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협력방안 추진
 - 커머셜 다이얼로그는 미 상무부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과 운영 중인 경제협력 채널로 다각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 하는 개체
- ☐ 국가들 간에 '대화(dialogue)' 방식의 '협의 채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경제, 안보, 외교 등 다루는 주제에 따라, 혹은 그 대화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의 책임과 권한 수준, 즉 국장급이나 차관급이나 장관급이나 등에 따라 실무급 대화, 최고위급 대화 등으로 차별화
 -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경제/금융 협력 채널 확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우에 따라, 양국의 경제 관련 부처와 외교 부처의 장관급 인사들과 중앙은행이 함께 참여하기도
- ☐ 이런 대화 채널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임.

- 미국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들과 경제, 외교, 안보 등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여러 개의 '대화' 채널을 운용함.
- 이를 통해 적잖은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함.
- 2015년 12월에 열렸던 중국과의 안보 대화에서는 사이버 안보 문제를 다뤘고, 환율 문제나 지재권, 기술 표준 등도 단골 주제임.

나. 협력 강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과 한계

- 한-미 간 산업협력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매 정부마다 계속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산업협력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임.
- 참여 정부 당시 마련됐던 한·미 산업협력위원회 역시 양국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2010년 이후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미국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기본 입장이 타국과의 산업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주변국과의 관계 등도 신중하게 고려
- 2013년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3개국이 추진했을 때도 일본 등의 반발로 범위와 위상을 축소 조정한 바 있음.
- 특히 산업 정책 변화는 참여 국가, 지역의 일자리 및 경기 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commercial dialogue는 환율, 지재권 등을 다루는 경제 대화와는 입장이 다름.
- 한미 양국 주력 산업의 산업구조가 크게 달라 교집합 부분을 찾기 힘들다는 점도 협력 강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
- 같은 산업이나 부문에 속하는 업체들마저도 가치사슬 상 위치가 크게 달라 협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 협력 가능한 유망 업종 발굴이 급선무

□ 규제 철학 등 제도와 관련된 환경 차이도 큰 편

- 한국은 기본적으로 사전적 규제(positive system)를 중시하는 반면, 미국은 사후적 규제(negative system)에서 출발
- 미국이 추진 중인, 혹은 산업 협력 채널을 통해 결정한 정책이 한국경제 현장 및 관련 제도에 얼마나 이식(transplant)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해 봐야 함.

2. 한-미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안

가. 한-미 경제협력 방안의 전략적 목표

□ 국가 간 대화 채널의 종류는 참여 국가 숫자에 따라, 그리고 경제, 안보, 외교 등 포괄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함.

- 대화 채널의 전략적 목표는 포괄 범위 확대, 참여 수준 향상, 실효성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각 채널마다 편차 큰 편

□ 양국 경제가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발전 단계를 밟아감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로부터 앞선 지식과 기술, 경험을 얻었고, 미국 기업들 역시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미국 경제구조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고도화됨에 따라 양국 간 분업의 형태가 바뀌고, 두 나라 기업 간 협력의 여지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임.

□ 과거 한미 경제 관계는 제조업 내에서의 분업구조가 근간을 이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은 한국이, 서비스업은 미국이 담당하는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 왔음.

- 이처럼 서로 다른 업종 간의 분업이 늘어나면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협력(cooperation)'보다는 단순히 가격과 수급 여건에 맞춰 서로의 필요를 주고받는 '거래(deal)'로 양국 기업들 간의 관계가 바뀌어가고 있음.

- 이와 같은 구조적인 분업 형태를 바꾸지 못한다면 수평적인 산업 협력은 어려울 수밖에 없음.

나.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

□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국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함.

- 미국 국민들의 일터와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는 주체가 바로 기업들이기 때문
 - 개별 기업의 흥망과 성쇠는 그 기업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속한 모든 노동자들과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운명과도 직결됨.

□ 한미 간 산업 협력 역시 그 주체와 수혜자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기업들의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 측은 공공부문이 협력을 주도해도 기업 측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만, 한국의 경우 그런 전달 경로가 불확실함.
 - 따라서 양국 기업이 산업 협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그런 의견을 정당하게 취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그 혜택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 양국 간 채널이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지 보완 관계를 목표로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함.

□ 미국과 EU와의 관계가 대표적인 협력 관계에 해당함.

- 경제적으로는 경쟁관계라 할 수 있지만, 환경이나 지적재산권, 기술표준처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들을 주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협력

- 2015년 12월에 타결된 '파리 기후협약' 역시 그런 특징을 잘 보여준 결과

□ 반면, 미국이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맺는 관계는 보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한없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때에 그 반대급부로 외교적 지지를 얻어냄.

○ 우리 역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각 사안에 따라 협력과 조율을 중시할지, 아니면 양보와 지원에 힘쓸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임.

□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경제적, 외교적 비교우위를 분명히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함.

○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들 역시 둘 사이에 주고받을 이익이 분명할 때 협력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

- 한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처럼 거대 시장을 제공하거나, 일본처럼 첨단 기술을 앞세울 수는 없는 만큼, 동아시아에서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3. 유망 분야 및 산업 협력 전략

가. 바람직한 협력 형태 및 전략

□ 한국과 미국 관계 뿐 아니라 세계경제, 동아시아 등 한국을 둘러싼 세계경제 환경을 모두 고려해 우리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잘 찾아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

○ '양자 간 대화'가 잘 이뤄져야 이를 바탕으로 복수 국가 간 협력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TPP 등의 메가 FTA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도 활용 가능

☐ 신사업 R&D투자에 대한 민간기업 중심 협력 필요

- 신사업은 일반 기업이 R&D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양국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정부 R&D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음.
- 정부와 민간 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 예컨대 중장기 관점의 기초 기술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단기간 내에 성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나 응용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담당하는 등의 분담 원칙 마련이 필요함.

☐ 규제 해소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필요

- 의료 서비스, 사업서비스의 시장 진입 활성화 등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면서도 한미 양국 기업 모두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이슈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 작은 부분에서라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냄으로써 산업협력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구체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분야라 할지라도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해당 이슈를 선점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 혹은 아시아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임.

나. 유망 분야/산업 및 주요 전략

미국의 지적재산권 강화 관련 협력

☐ 무역대표부는 최근 몇 년 간 통상정책아젠다 (Trade Policy Agenda)에서 경제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면서 지재권보호를 강조

- 전세계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국의 창의력과 혁신을 구현하는 지재권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재권의 효율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의 첨단산업분야 기술기업과 근로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1900만 명의 미국인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

□ 한편 한·미 FTA 발효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지재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3국에서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와 관련 양국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함.

기후 변화 관련 협력 강화

□ 2015년 12월 타결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반영, 그린에너지 등 관련 분야 협력 모색 가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기존 경제패러다임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

- 미국은 세계 제1위의 에너지 생산·소비·수입국가일뿐만 아니라, 세계최고의 녹색에너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 및 노하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

□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는 범지구적 문제로 향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임.

- 저탄소·녹색성장분야에서 미국의 ‘시장’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양자협력은 우리나라에 수출증대와 기술력 배양이라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 특히 미국의 에너지전략이 점차 재생에너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및 기술 협력을 통한 제 3시장 진출도 함께 모색

-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저탄소배출형·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협력 방안 모색

- 한국은 기존의 상품위주 교역 및 제조업 중심의 투자 진출에서 서비스 상품 교역과 서비스업 투자 확대로의 전환 필요
- 한국의 서비스 관련 투자 및 수출입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관련 분야 미국 기업들의 성공 및 실패 사례 조사, 서비스업체의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한미 간, 혹은 제 3국과의 공동 협력 방안 모색
-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물류, 서비스 아웃소싱, 교육 등 분야의 개방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

기타: 제조 역량 기반 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협력 확대

- 한국 기업들의 강점으로 꼽히는 제조 역량과 미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 및 상품 개발 능력을 접목시킬 수 있는 협력 모델 발굴
- 상품이나 서비스 가치사슬 전체를 차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수익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런 의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음.
- 독점보다는 이중 기업 간 협력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음.
-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비교우위 요소를 기반으로 제 3국에서 CSR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협력도 검토할만함.
- 기업의 CSR 활동은 개별 소비자나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비즈니스의 공익성을 높이거나, 해당 기업이나 산업이 유발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보상하기 위한 사업도 이에 해당함.
- 화력발전, 석유화학 등 CO2 배출이 많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그린 비즈니스, 환경 친화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활동이 이에 해당함.